7노트 과속·30도 꺾어 접안 … 도선사 실수? 선체 결함?

여수 기름 유출

해경 중간수사 발표 의문 투성이

예인선 후진 시도
충돌직전 줄 끊고 이탈
도선사 진술 납득 안돼
진로 벗어난 운항 등
추가 조사 필요
GS칼텍스 늑장대응 지적도

지난 31일 발생한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 원유 유출 사고는 유조선의 '과속'에서 비롯됐다는 해경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도선사는 해경에서 "후진하면 배가 정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력 23년에 월 10회 이상의 접안을 담당해온 베테랑 도선사의 단순 '오판'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선체 결함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해경은 3일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원유부두로 접안하던 유이산호가 안전속도를 넘는 약 7노트의 속도로 진행한 게 충돌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조선이 접안할 경우 통상 접안 속도를 3~4 노트 이하로 이동해야 하지만 사고 선박은 예인선과 결합한 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돌진'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해경은 유조선이 하역시설과 충돌 직전인 오전 9시27분께 9노트(16.6㎞/h)를 유지했고 9시30분에는 8노트로 줄였지만 충돌한 시각인 오전 9시35분까지 7노트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또 여수·광양항의 경우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입출항하는 유조선 등 대형 외항 선박은 도선사에 의해 입출항하도록 돼 있는데다,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김모(65)·이모(59) 도선사 2명이 사고 1시간 30여분 전인 8시18분 인근 섬인 대도에서 유조선에 탑승했다는 점에서 도선사의 속도·방향 오판 가능성 등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키를 잡고 부두에 접안해 제품을 하역한 뒤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고 선박에 탑승했던 도선사 김씨는 해경에서 "후진출력을 하면 충분히 배가 정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조선에 타고 있던 도선사가 23년 경력의 베테랑인데다, 매월 10차례의 접안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음주 운항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오판'로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배를 예인하던 예인선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후진을 시도한 점, 예인선이 위험을 감지하고 충돌 직전 유조선에서 줄을 끊고 이탈하는 상황인데도 2명의 전문 도선사가 기존 속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경이 향후 유조선 접안 과정에서 베테랑 도선사가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지, 접안 부두를 150여m 남겨두고 예정 진로보다 30도가량 벗어나 운항했는지, 당시 조타실에 탑승한 해당 유조선 선장 등 다수 선원이 통상적 접안 속도에 비해 높은 속도를 감지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GS칼텍스 측이 이 날 9시35분 사고가 발생한 뒤 30여분이 지난 10시5분께 여수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거쳐 여수해경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사고 후 5㎞ 가량 떨어진 상황실에서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 곧장 해경에 신고했다"며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도선사(導船士)

선박 입·출항 때 탑승해 부두까지 인도하는 전문가
연봉 1억5천만원~3억원

도선사(導船士 pilot)는 바다에서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뒤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한국도선사협회에 따르면 "도선사의 역할은 항해를 보조하거나, 항만으로의 접근과 접·이안 및 입·출항을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선박의 진행을 이끄는 데 있다"고 명시됐다.

현행 도선법에 따라 외국선박의 경우 500t, 국내 선박의 경우 1000t 이상인 선박에서는 반드시 도선사를 태우도록 규정돼 있다. 보통 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선박에 탑승, 선장으로부터 선박조종의 지휘권을 위임받게 되며 기상과 해류·선박의 크기와 종류를 고려해 배를 부두에 접안시키고,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선박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도선사는 선박 조종은 물론 항구와 항만의 위치와 기상요건, 물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6000t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의 선장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규(도선법·개항질서법·행상교통안전법·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해양환경관리법), ▲운용술 및 항로표지, ▲영어시험을 통과해 도선수습생을 뽑는다.

이 후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대상자에 한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인원만이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탓에 평균합격 나이는 50세 가량이다. 보통 도선료는 입·출항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도선사의 연봉은 1억5000만원~3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현재 한국도선사협회에 등록된 총회원은 245명, 이 중 여수(광양)지회 소속은 39명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설 뒤끝…넘치는 쓰레기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설 명절 연휴 기간 시장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깊어지는 금호 형제 갈등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측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정 기록 빼내 이용 의혹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 째 법정 다툼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엔 박찬구 회장 측이 형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문건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보안요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빼돌리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인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A씨로부터 부탁받고 그룹 비서실에 들어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방실침입 및 배임수재)로 용역 보안요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고소장에서 B씨가 A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회장 비서실에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으로 포섭,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금호아시아나는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 자체조사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빼냈고, 이 정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며 "사태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목포경찰서 소속 女警 자택서 목 맨 채 숨져

2일 오후 8시30분께 목포시 상동에 거주하는 목포경찰서 소속 김모(여·34) 경장이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3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퇴근 후 작은방이 잠겨 있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어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세버스 확 줄인다

정부, 과잉공급 해결 신규등록 총량제 도입

통근·통학, 관광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안전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지입차량도 앞으로는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로 바뀐 여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7월께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세버스 줄이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검찰, 시국미사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보수단체 고발 따라

검찰이 시국미사에서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72) 원로 신부에 대한 고발·진정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3일 보수단체 등이 박 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 선동 고발·진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군산지청에 접수된 박 신부에 대한 고발 4건과 진정 4건 등 모두 8건에 대해 일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박 신부의 주거지가 익산인데다 미사 장소가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전주지검에 배당했다. 전주지검은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 등을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에 보냈으며,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할 계획이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檢 '보복범죄 방지' 피해자 신상정보 이용 범죄 엄단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처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가족 등)에게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에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피해 차 세워놓고 도주 … 교통방해죄 처벌

쌍나팔

○…음주 단속에 걸릴까 두려워 길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보다 수위가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처지.

○…3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임모(43)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께 무안군 삼향읍 중앙공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고 단속 지점 50m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임씨 때문에 일대 교통이 30분 가량 정체된 점을 감안, 범행 3일 만에 경찰서를 찾은 임씨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아닌,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

/무안=김민준기자 jun@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26867	1	서구 금호동 815, 호반리젠시빌아파트 205동 3층 302호 84.9940㎡	아파트	186,000,000 18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19722	1	광산구 소촌동 533-4 585㎡[공유자유병헌지분585분의132전부]	대	51,942,300 51,942,300	임차인있음,일괄매각,목록2,3현황 및면적공부와상이
		광산구 상무대로 247-12 1호 66.5㎡	단독주택		
		광산구 상무대로 247-12 8호 41.32㎡	단독주택		
2013타경 25581	1	서구 염화로65번길 20-1 1층102.78㎡ 2층90.09㎡ 제시외 다용도실 14.6㎡	단독주택	168,763,380 168,763,3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
		서구 화정동 925-11 176.2㎡	대		
2013타경 26300	1	곡성군 입면 송전종방길 128-11 69.7㎡ 제시외 통로및보일러실 23.6㎡[임차인있음]	단독주택	37,981,600 37,981,600	제시외포함건물만매각,파이프골조매각제외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7891	1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287-1 2190㎡ 제시외 관정 1식	답	143,822,000 143,822,000	일괄매각[목록1제시외수목및관정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87-2 1518㎡	답		
		동소 287-3 1518㎡	답		
		동소 287-4 3030㎡	답		
2013타경 28160	1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780, 3201.4㎡	답	35,215,400 35,21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28771	1	북구 장등동 918 707㎡ [현황답]	전	20,856,500 20,856,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3타경 27594	1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3-8 272㎡	주차장	24,752,000 24,752,000	현황잡종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2. 19.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2. 26.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